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49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이상식 · 문대림 · 이병진
임호선 · 양부남 · 이광희
모경중 · 이개호 · 박해철
박선원 · 윤준병 · 김 윤
이재강 · 소병훈 의원
(14인)

제안이유

자동차에 탑재된 인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며 세계 각국은 2030년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와 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목표로 주행 기술개발과 서비스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여 도로교통운영, 면허제도 등 도로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운전자를 상시적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운행자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간소면허체계인 자율주행 운전

면허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특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를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거나 도로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응하여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조작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군집주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마. 시·도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별도로 구분하고 관리하고,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율주행 운전면허 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경찰청장이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진흥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등 사업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
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거나 도로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①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정책 환경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한 운행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기술(이하 “자율주행 교통 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7조에 따른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교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가 도로교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군집주행(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동일한 간격을 두고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의 제한 등) ①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기간을 정하여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주행 운전면허)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이하 “자율주행 운전면허”라 한다)의 범위를 별도로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자율주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⑤ 자율주행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②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 지식
2.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작에 관한 사항
3. 돌발상황 시 운전제어권 전환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으로서 자율주행시스템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고장 시 대처에 관한 사항
6.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도로교통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방법,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 등) ①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주행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작에 관한 사항
5. 돌발상황 시 운전제어권 전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 및 면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율주행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도로교통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교통정보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정보의 종류와 수집·분석·제공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와 제도적·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수집한 자율주행 교통정보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3조(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조사)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제6

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사고기록장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에 따라 설치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진흥) ①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진흥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4. 개발된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평가
5.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협력·이전 등 실용화
6. 그 밖에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경찰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진흥 시책과 국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경찰청에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진흥 시책 수립
4. 제16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5.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2.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2조(범칙금) ① 이 조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제20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 등에 따른 범칙금(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의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범칙금의 납부 및 그 방법,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직권 남용의 금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4조의2, 제165조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을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4장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삭제한다.

제98조의2 본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0조 중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를 “제73조”로 한다.

제156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160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의3제1항·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
을 “제53조의3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0조
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제10호 및”을 “제160조제2항제
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 및”으로 한다.